

‘사탐런’ 이어 ‘확통런’? 〈확률과 통계〉 쓸림 심화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공 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 경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학 문턱은 낮아졌지만, 이공 계열 기초 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기준 완화가 선택 바꿨다

종로학원이 전국 4년제 대학 174곳의 2027학년 정시 모집 계획을 분석한 결과, 166개교(95.4%)가 이공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이나 〈기하〉 응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확률과 통계〉만으로도 공대 진학이 가능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험생의 수능 응시 과목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은 2026학년 56.1%로 〈미적분〉(41.0%)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도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확률과 통계〉로 이동하는 이른바 ‘확통런’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현상이 지속될 시, 결과적으로 이공계 신입생의 수학 기초 수준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가에선 이미 신입생들의 수학 기초가 약화되면서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교에서 〈미적분〉을 학습했다는 전제로 구성된 전공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기초 과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점수 구조의 변화도 확통 쓸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간 표준점수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미적분〉이 유리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줄어들면서 과목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진 상태다.

다만 최상위권에서는 여전히 〈미적분〉 선택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표준점수에서는 〈미적분〉이 앞서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육성 정책과 충돌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2026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경복고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이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입시 구조는 오히려 기초 수학 학습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적 불일치는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대학은 입학 기준을 완화하고 수능은 선택 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지만, 정작 이공계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학력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시 제도가 학습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는 과목은 자연스럽게 선택에서 제외되고, 이는 교육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변화는 단순한 입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 교육 기반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추는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과 산업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공계 인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기초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향후 입시 개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원비 상승, 가격 아닌 '편법 구조' 때문

정부가 학원비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수익 구조를 겨냥한 조치다. 점검 결과 학원비는 가격이 아니라 편법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 포스(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학원 1만5천925곳을 점검한 결과 총 2천394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고,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등록된 교습비를 넘는 추가 비용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방식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 모의고사비·차량비·기숙사비 등 기타 경비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학원은 등록 금액보다 2배 이상 교습비를 받다 적발됐다.

처분은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으로 이어졌다. 과태료는 707건, 총 9억3천만 원이 부과

됐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351건의 의심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고, 신고 포상금도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한다. 관련 내용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단속도 확대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발된 학원에는 경찰 수사와 국세청 점검이 병행되고,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학원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낮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점검은 체감 부담 증가가 구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등록된 가격은 통제되지만 실제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대입 상담 교사 500명 투입... 공공 상담 확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진학 지도 경험 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고 공공 대입 상담 체계를 확대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진학 상담 분야를 공교육으로 일부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지원한다.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상담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연중 상시 제공된다.

이번 확대 조치의 핵심은 사교육 수요가 집중된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디가'를 통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온라인 상담이 제공된다.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참여로 마련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

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도 도입된다. 6월 말부터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대화형 정보검색 챗봇이 신설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별 모집요강, 합격선과 성적 등의 정보를 대화형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입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부터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문형 대입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교사가 직접 시설을 찾아 진로 설계와 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8 대입 개편에 대비한 정보 제공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 계획 분석을 담은 <대입정보 119>를 오는 11월 '어디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요 대학과 연계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대입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